
김문수 측근. 깨끗하다고요?

16일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“김문수 공직생활 삼십 년 동안에 측근들 비리로 처벌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”고 주장했습니다. 완벽한 거짓말이자 가짜뉴스입니다.

김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일정팀장을 맡은 손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반증입니다. 손 전 실장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시절 보조금 횡령 등이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 수사에 넘겨졌고,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. 보조금 횡령 정도는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비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.

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관리실장이었던 한 모씨도 있습니다. 한 씨는 골프장 인허가권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, 김 후보 스스로도 2009년 11월 27일 도내 기관장 모임에 참석해 “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이 구속돼 면목이 없다”고 사과까지 했습니다.

처벌받은 측근은 더 있습니다. 김 후보의 자타공인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온갖 저급한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,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한준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위법하게 김 후보를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.

이런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김 후보가 청렴결백의 상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란을 비호하고 극우를 선동한 김 후보의 과거는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. 결국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.

2025년 5월 17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